



## 국내·외 축산소식



### “역시 거세우” ... 두당 80만원 더 받아

거세우가 비거세우에 비해 두당 80만원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올초부터 현재까지(2007.1.1~7.6) 국내에서 도축된 한우는 총 6만7천553두다. 이 가운데 거세우는 3만2천396두, 비거세우는 1만1천471두, 그 외 암소는 2만3천686두로 각각 나타났다.

### 1등급 이상 출현율 거세 67.8%비 비거세 2.3% 불과

특히, 고급육 생산 면에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거세우가 67.82% 인데 반해 비거세우는 2.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소득에도 직결돼 거세우의 평균 경락가격이 1만5천57원/kg, 비거세우는 1만3천169원/kg이다.

kg당 약 2000원의 가격차는 도체중 400kg으로 가정하면 거세우가 비거세우 보다 두당 80만원이나 높게 받은 계산이 나온다.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다. 이 같이 거세와 비거세 사이의 가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최근까지도 50%를 밀들던 거세율이 75%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일부 농가들은 아직도 비거세 단기비육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거세우의 출하연령은 보통 26개월로 거세 고급육에 비해 4개월 이상 짧다. 그만큼 자금회전이 빠르고,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농가들이 비거세우 사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 또한, 아직 일부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비거세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비거세우 사육농가들은 고급육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 수취금액이 적고,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 이천지역의 한 거세우 사육 농가는 “최근 20두 정도 비거세우를 사육한 경험이 있다”며 “출하를 하고 난 다음 비교해 보니 1마리만 1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2등급 미만이나와 생산비를 감안하고도 마리당 4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 농가의 경우 평소 고급육 출하성적이 80%를 넘는 농가다.



농림부는 최근 15년 한우장기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거세율 100%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높여 수입쇠고기와 품질 차별화를 꾀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

전문가들 역시 거세 고급육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생산비를 낮춘 비거세우 사육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급육 출하를 통해 수익을 안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농장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축산신문]



### 오제스키 청정 '눈앞'

돼지오제스키(AD) 청정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5월까지 AD근절사업을 통해 시료채취 및 농장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 김해 관리대상 양성농가 수가 8개 농가로 지난해 12월 13개 농가보다 5개 농가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제스키 청정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양돈타임즈]



### 한미 FTA 보완대책 공금증 문답 풀이

“기준가격 이하때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정부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은 여러 곳에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한가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한·미 FTA 협정문이 한국 국회나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번 대책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정부 대책은 단기 피해보전 대책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단기 대책은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가 핵심이며, 장기 대책은 FTA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비준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면 단기 피해보전 대책은 휴지조각이 된다. 반면 장기 대책은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과 관계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

▶재정은 기존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겹치는 부분과 신규 증액사업으로 나뉜다. 한·미 FTA 재정지원 기간(2008~2017년) 중 119조원 투융자계획 기간과 겹치는 2013년까지는 기존 투융자계획이 일부 수정돼 반영되고, 2014~2017년에는 별도의 한·미 FTA 재정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는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 등의 품목과 대상, 요건 등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 재원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가격이 안 떨어져도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다는데.**

▶아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 대책을 잘못 이해해 나온 말이다. 정부 대책을 보면 직불제 발동 요건에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고 △당해연도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등의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직불제도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직불금 산정방식은 기존 가격 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으로 바뀌었다.

가격 하락률에 비해 생산량 증가율이 커질 경우 농가 소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획기적(최소 20%)으로 늘어나야 한다.

**- 농업에서 손을 뗀 농가들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장려금이 지급된다는데.**

▶맞다. 그렇다고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원지원금을 받은 농민들을 고용해야 장려금이 나온다. 현 정부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폐원지원제도가 작동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신문]



## 가축질병 유발 모기 바이러스 추적한다

소, 돼지 등 가축의 질병을 유발하는 모기 바이러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국립수의과학원과 공동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지역별로 모기채집 농가를 선정해 모기를 수집하고 모기 종류별 바이러스를 분리해 바이러스 유전자 자원을 확보한다.

연구소는 또 각 모기매개 바이러스의 항원과 항체를 확보해 아카바네, 아이노 바이러스 등의 유전자 분석과 아미노산 서열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항체진단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모기에 대한 예찰과 백신 접종 등 방역예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람에게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등에 대한 바이러스 추적과 방역예찰 시스템은 있으나 가축질병을 유발하는 모기를 특정하기 위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연합뉴스]



## 돼지 육질등급 높게 받으려면...

오늘부터 출하되는 돼지들은 소처럼 육질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육질등급을 1+, 1, 2,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자.

최규진 축산물등급판정소 팀장은 “등급판정의 1차기준으로는 적절한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고 2차적으로는 육색, 조직감, 지방 침착도, 지방색, 삼겹살 상태, 결합 등을 본다”면서 “조기출하할 경우 체중 미달 및 조직감 등에서 문제가 되므로 최소 100kg 이상에서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또 “브랜드 경영체 농가들도 후기 사료 급여율이 25%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젓 먹이사료를 출하 때까지 급여하면 과지방이 되는 등 육질에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해 조직이 탄력을 갖고 고기색이 좋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천하제일사료 양돈PM은 “출하일령을 최소 170~180일령으로 해야 마블링 형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마블링이 잘 되는 특징이 있는 듀록계통의 웅돈 사용도 좋은 등급 받는데 일조할 수 있고 적정사육두수를 키워 충분히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분뇨방출 각별 주의 요망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장마기간 동안 가축분뇨가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림부는 장마철에 분뇨 방출로 인한 하천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과 합동으로 5개 반, 19명을 투입하여,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하천주변 농가, 해양배출 농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양돈협회는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농가에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붕이 없는 액비저장조 또한 사전에 저장조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리 점검을 통해 양돈농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또한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요령을 리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액비저장조의 경우 20%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해 집중강우 시 넘침을 방지하고 저장조 벽면에 균열이 없는지 또는 연약지반으로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퇴비화시설은 야적된 퇴비에 대한 비가림 시설과 주변 배수로 설치 및 침출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화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된 분뇨이송 배관, 저장조, 폭기조 등 빗물 유입방지를 통해 미생물활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돈자조금]



## 재경부 “車,쇠고기 한미FTA 걸림돌 아니다”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일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수출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와 관련해 미측이 자동차 및 고기 수출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관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어렵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돼 있다”라며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쇠고기 역시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자동차나 쇠고기가 한미 FTA의(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추가협의를 서둘러 끝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6월30일 이후로 협상기간을 늘리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돼 법적 효력에 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추가 요구사항이 4월 2일 타결 당시 내용과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미국이 자동차,쇠고기에 대해 불만이 많아 재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빨리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협의 결과와 관련해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했고 의약품 부문에서(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점, 미 부시 대통령의 비자면제 환영 성명 발표 등이 뒤따른 것은 우리 측의 이익”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미국의 TPA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협정문에 서명한 뒤 이를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가부는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 의회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관은 “비준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계층은 미국 기업인 만큼 한미 재계회의를 통해 미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경부 김동수 경제협력국장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개성공단 관련 조항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30일 양국의 정부 대표가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에 미 의회는 전체 패키지를 놓고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적 요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미 민주당의 반대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가장 강하게 요청했던 것이 노동과 환경 부분을 추가해달라는 것”이라며 “추가협의 골격이 이 두 분야이며 민주당 요구대로 검토했고 반영됐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